

# 장윤기 1심 판결 불복... ‘절대적 종신행’ 도입 재점화

“평생 죄값을 가져가겠다”며 사죄했던 장윤기(23)가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흉악범의 가석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행) 도입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기는 항소 기한 마감일이었던 지난 7일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오전 12시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인근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7)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여의치 않자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지난달 30일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면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는 점,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행’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와 피고인의 연령·전과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유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재발을 막는 길”이라는 판사 3명의 일치된 견해를 판결문에 명시하는 등 사실상 종신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법원의 형 집행이 가석방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판단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없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무기수형자는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항소 기한 마감일인 7일 항소장 제출

재판부 “종신행 복역 필요” 판결문 명시

법적 구속력 없어...10년내 140명 출소

도입 찬성 여론 속 인권 침해 논란 여전

며, 교정성적과 범죄 내용, 재범 위험성 등을 심사해 법무부장관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실제로 무기수 가석방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가 올해 7월 발간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가석방으로 출소한 무기수형자는 모두 140명으로, 지난해에도 9명이 가석방 허가를 받았다.

피해자 유족 측도 무기징역만으로는 영구 격

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채원 양의 어머니는 1심 선고 직후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법으로 제도화해 강력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족 법률대리인 김문석 변호사는 “재판부가 사회적 영구 격리를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는 하나, 그것은 사회적 영구 격리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필요성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법안은 17대 국회부터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법제화되지 못했으며, 2023년 법무부가 제출한 형법 개정안도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다. 한국갤럽이 2023년 8월 전국 성인 1천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7%가 도입에 찬성한다

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발표한 실태조사에서도 사형제를 대체할 형벌이 마련될 경우 사형제 폐지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66.9%에 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석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형벌이 교화 가능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 또한 2023년 관련 법안 검토 과정에서 진행된 국회 의견 질의에서 “사형제를 유지한 채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면 기존 무기징역이나 중형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전체적인 형벌의 무게와 수위만 높아질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광주지방법공소장은 지난 2일 형량이 가법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형의 양형 적정성과 범행 도구로 지목된 케이블 타이의 증거 인정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지현 기자



충장 꿈나무 축제 제23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이틀차인 8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금남로 주무대에서 충장 꿈나무 축제가 진행돼 아이들 ‘추억의 노래’를 주제로 끼와 재능을 발산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 “운행 늘고 전습은 무급”... 시내버스 개편 앞두고 반발

운전원들, 증회 보상·휴게시간 보장 요구

市 “운행자료 반영...전습은 업체 소관”

이달 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앞두고 일부 운전원들이 운행 부담 증가와 무급 노선 견습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광주지역 시내버스 운전원들은 8일 오후 3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주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증회에 따른 보상과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새 노선 견습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당초 개편안은 증차 없이 하루 운행

횟수를 96회 늘리는 내용”이라며 “운전원 총원이나 추가 보상 없이 운행만 늘어나면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휴게·식사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운전원들은 새 노선을 익히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점도 문제로 꼽으며 근무시간 내 공식 견습운행 편성과 근무 외 노선 숙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식적인 견습운행 일정이 마련되지 않아 휴일이나 출퇴근 전후 개인 차량과 대중교통을 이용해 자비로 노선을 익히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전남광주시는 휴게시간을 반영해 개편안을 마련했으며, 견습 수당 지급 여부는 운

수사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실제 운행자료를 토대로 주행시간을 산정하고 회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반영하도록 운수사에 요청했다”며 “운전원 1인당 하루 주행시간이 약 17분 늘어나는 구조지만, 최종 시간표는 협의 중으로 운행횟수는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선 설계와 재정 지원은 시가 맡지만, 별도 견습 수당 지급 여부는 운수사가 결정할 노무 관리 사항”이라며 “증차 없이 시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려는 개편인 만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정된 자원을 나눠 쓴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연상 기자

## 경찰, 나주 60대 부부 살해 피의자 계획범죄 정황 수사

얼굴 가리고 CCTV 사각지대 도주

고의성 규명...강도살인 혐의 적용



8일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A(50대)씨가 전남 나주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광주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은 범행 전후 행적에서 드러난 정황을 토대로 계획범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8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A(50)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18분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부부가 사는 마을로 진입했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 소유 1t 화물차에 자전거를 싣고 5.7km가량 달아난 뒤 차량과 자전거를 잊따라 버렸다. 경찰은 두 이동수단을 버린 구간에 CCTV가 없다는 점을 들어 사전에 도주 경로를 파악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A씨는 피해자 부부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 갔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흉기 사용 경위와 범

행 전후 행적 등을 토대로 살해 고의성을 규명해 강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5일 나주시 왕곡면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결박하고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지현 기자

## 준강간미수 혐의 기상청 공무원 ‘해임’ 처분

기상청이 준강간미수를 저지른 광주지방기상청 소속 공무원에게 경제 사정과 가족 부양 등을 참작해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기상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준강간미수로 지난 4월8일 해임됐다.

A씨는 하급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징계 과정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부

양 사정 등이 참작됐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광주기상청에서 징계를 받은 인원은 A씨를 포함 4명이다.

2021년에는 직장 내 갑질, 202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각각 감봉 1월 조치를 받았다.

올해 5월27일에는 소속 직원이 성비위 2차 피해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해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기상청 전체에서 징계 건수는 총 39건이며 이중 성비위로 인한 징계는 총 7건이다.

/서형우 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